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 방역활동 이모저모

ICT 융복합기술 접목...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지원

전남도는 2017년 기준 오리 410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한민국 오리의 절반이 전남에서 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액도 매년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 3,194억원의 오리를 생산한 전남도는 2017년 4,767억원의 오리를 생산했고 이는 전년도인 2016년과 비교해도 32%이상 늘어난 수치다. 1억원 이상 고소득 축산농가에도 오리 농가는 42농가가 해당, 전남 전체 고소득 축산농가 중 약 3% 정도를 차지한다. 오리왕국, 전남도의 오리관련 정책을 점검해 본다.



전라남도
JeollaNamdo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기본 방침 ◎

-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확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수출기반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악취저감 지원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시책 추진 방향 ◎

1.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농장 조성 확대

- 축산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최적의 환경친화형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2.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확충 및 악취발생 최소화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내 완료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확보

3.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가공·유통시설 확충

-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 안정적 확보
- 한우 개량촉진 및 송이브리드화 등 축산물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4. 곤충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 곤충, 말산업 등을 농촌의 미래 성장산업 소득원으로 발굴·육성
- 폭염예방 시설·장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스마트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 발판

2018년 전남도는 스마트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한해였다.

깨끗한 축산농장(258호), 녹색축산농장(141호) 지정을 비롯해 1,406호에 대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완료했다. 또한 환경친화형 축산시설을 326호에 지원하고 보급형 스마트 축산농장 133호를 육성했다.

2018년 11월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후보지 우선협상대상자로 합평군이 선정되면서 가축개량평가·낙농·양돈·초지사료 등 4개과가 이전했다.

전국 최초로 폭염 대응 시설·장비 등 예비비 긴급지원 100억원을 소요, 선제적 예방으로 가축 폭염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ICT 융복합기술 접목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지원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농장 조성 확대

전남도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축산 사업은 축산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최적의 환경친화형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남도는 실제로 5,000마리 이상의 오리사육농가가 2018년 362호에서 2019년 370호로 확대된 바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도 적극 추진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전남도는 축산농장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저감시설과 미생물제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돼지, 닭·오리 농가의 축사 악취저감제 800톤을 지원, 총 48억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축산농가의 최대 고민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전남도는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장형 정책으로 각광을 받았다.

시장 군수에게 도지사가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월 2회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각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을 매



주 관리했다. 또한 월 4회 농가별 관리카드를 점검하는 등 전남 광역단위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농가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남도는 도 및 시·군별

4~6개팀을 구성해 농가별 문제점을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시·군 단위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광역단위에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졌다.

오리 농장 주변-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